

국가 안전정책 방향

2017. 11. 17

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

순서



“사람이 우선인 안전한 나라” |

- 왜 안전인가
- 우리나라의 안전관리
- 국민안전 정책방향
- 안전한 대한민국

왜 안전인가

1 왜 안전인가?

한강의 기적, 위대한 대한민국

- 2차 세계 대전 후 독립한 80개국 중 가장 성공한 나라
 - ▶ 1인당 국민소득(GNI) : 77달러(1964년) → 2만 7,561달러(2016년)
- 세계 9번째 무역 1조 달러 달성('11)
 - ▶ 미국('92) ... 독일('98) ... 중국, 일본('04) ... 프랑스('06) ... 네덜란드, 이탈리아, 영국('07) ... **한국('11)**
- 세계 7번째 20-50클럽 가입(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, 인구 5천만명)
 - ▶ 일본('87) ... 미국('88) ... 프랑스, 이탈리아('90) ... 독일('91) ... 영국('96) ... **한국('12)**

우리사회 안전관리 수준

- 19개 OECD 국가 중 안전사고 사망률 1위(2013년)



하루
78명 사망!

1 왜 안전인가

2

안전사고 발생 이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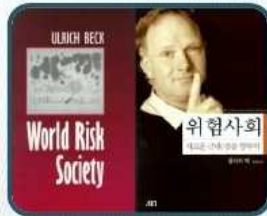
■ 하인리히 법칙 (Heinrich, 1931)

- ▶ 1 : 29 : 300 법칙
- ▶ 삼풍백화점 붕괴사고(1995) - 1,445명 사상자 발생
- ▶ 천장균열, 옥상 바닥손상 등 이상 징후 간파



■ 정상사고론 (Charles Perrow, 1984)

- ▶ 미국 3-mile 섬 원전사고(1979)
- ▶ 인도 보팔 화학공장 사고(1984)
- ▶ 시스템 안전역량 강화



■ 위험사회 (Ulrich Beck, 1986)

- ▶ "현대사회는 위험사회" 라는 인식 필요
- ▶ 국제 공조의 강화

1 왜 안전인가

3

우리나라 대형 사고의 교훈

지난 20년간 대형사고 분석결과, 유사한 문제점 반복 발생

삼풍백화점 붕괴('95)	• 무분별한 용도변경	법·제도 미비
•	• 종사자 책임의식 결여	+
대구 지하철 화재('03)	• 전동차 출입문 작동법 미숙지	안전점검 부실
•	•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 미비	+
구미 불산 누출('12)	• 선령제한 완화	교육·문화 미흡
•	• 형식적 운항관리·점검	+
세월호 침몰('14)		인프라 부족

시사점 → 대형사고 예방과 신속한 구조로 피해 최소화

[우리나라의 안전관리]

2 우리나라의 안전관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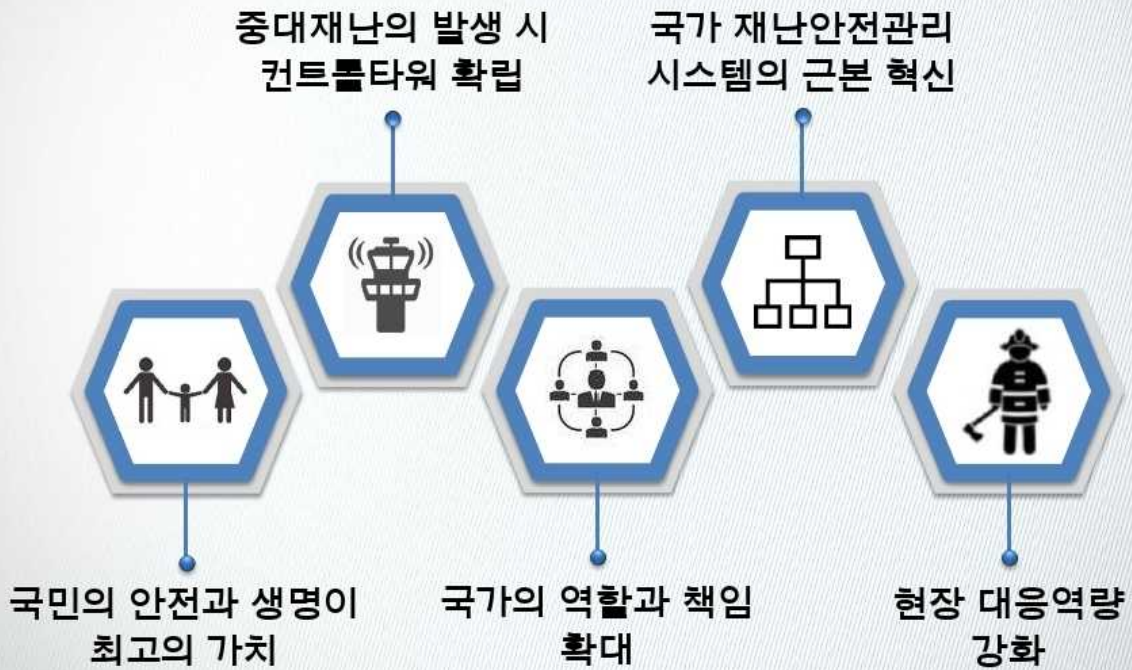
4

재난안전관리시스템의 변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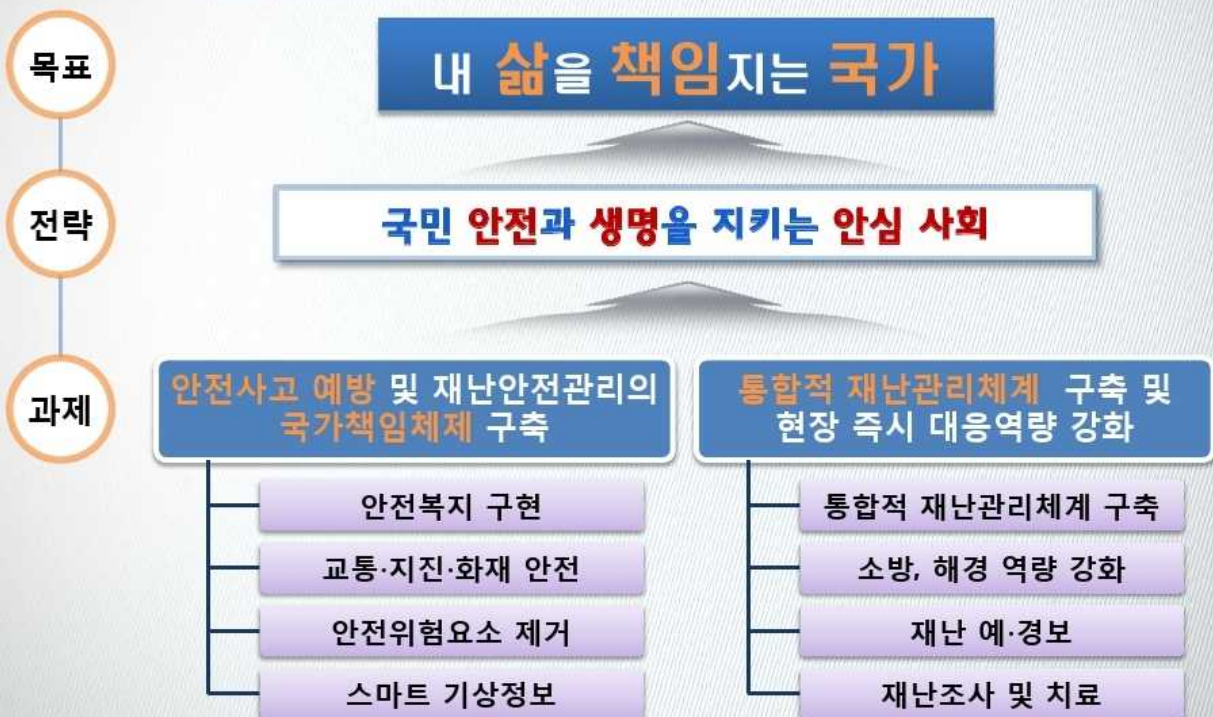
■ 대형사고 계기로 관련 법, 제도 및 기구 개편 등 시스템 발전



새 정부의 재난안전 철학



재난안전 국정과제



[국민안전 정책방향]

3 국민안전 정책방향 _ 국민안전 국가목표, 안전복지

7

안전 선진국 도약 기반 마련

■ 국민안전 국가목표제 추진



▶ 분야별 감축목표 설정, 성과지표 발굴 및 체계적 이행관리(반기별 실적 공표 등)

■ 안전복지 국가 구현

▶ 어린이, 노인, 장애인, 보행자 등 안전 취약계층 맞춤형 대책 마련으로 지원 강화

어린이	'20년까지 어린이 10만명 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 1명 대 진입(1.8명)	노인	'20년까지 노인 안전사고 사망자 20% 감축
장애인	장애인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	보행자	'20년까지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30% 감축

사전 예방 및 현장 중심 안전관리

■ 국가안전대진단 지속 발전

▶ '15년도는 양적 점검 중심 → '16년도부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질적 점검으로 전환

201

2015년	2016년	2017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간 : 2.16~4.30(74일) 대상시설 : 107만개소 현지시정 : 22,228개소 보수보강 : 37,714개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간 : 2.15~4.30(76일) 대상시설 : 49만개소 현지시정 : 21,070개소 보수보강 : 22,791개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간 : 2.6~3.31(54일) 대상시설 : 36만개소 현지1시정 : 6,791개소 보수보강 : 14,533개소

■ 안전관리체계 메타점검 실시

- ▶ 각 부처 안전점검 실태를 행정안전부가 표본점검(정부합동안전점검단)
- ▶ 대형사고 사고 가능성이 큰 4개 유형 20개 분야

<p>①기반시설</p> <p>교량, 터널, 댐, 산업단지 등 4개</p>	<p>②다중이용시설</p> <p>백화점, 요양병원, 공연장, 영화관 등 10개</p>	<p>③운송수단</p> <p>여객선, 지하철, 버스 등 3개</p>	<p>④주거·사무시설</p> <p>공동주택, 초등학교, 초고층빌딩 등 3개</p>
--	---	---	---



안전자치 실현으로 자치분권 지원 - ①

■ 매년 지역안전지수 공개(올해는 11월 말 예정)

▶ 교통사고, 범죄, 화재, 자살, 감염병 등 7개 분야, 시·군·구별 1~5등급으로 발표



■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전국 확대('12월 예정)

▶ 각종 재난안전정보를 통합, 치안, 재난, 시설, 보건 등 8개 분야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지도형태로 제작 및 공개



안전자치 실현으로 자치분권 지원 - ②

재난안전 특별교부세, 소방안전교부세 등 재정 지원

▶ 재해복구 및 예방사업 투자, 소방·안전 시설·장비 확충,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부여

* ('18년 예산안)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6,569억, 소방안전교부세 3,981억



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추진

▶ 17개 시·군·구 선정(도시형 8, 도농복합형 6, 농어촌 3),
안전사고 사망자 감축 성공모델 창출



국민과 함께 하는 안전관리 - ①

실천 중심 풀뿌리 안전문화운동 전개



대국민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본격 실시

- ▶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('17.5), 안전교육 기본·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
- ▶ 안전교육 콘텐츠 연차적 개발 및 보급(~'20년, 998개 / '16년 105개, '17년 80개 예정)

국민과 함께 하는 안전관리 - ②

국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안전신문고 활성화

- 처리 및 개선 현황('17.10월말 기준) : 395,915건 처리, 342,886건 개선
- 안전신문고 '앱' 스마트폰 선포재 실시('16.8월)



지진에 안전한 나라

지진 조기경보 및 국민안전교육 강화

☑ 이원화 (조기경보 기성형 - 송출(안전처))	현행	지진 재난문자	개선	☑ 기상청 일원화 ('16. 11월 완료)
☑ 2020년까지 (206 → 314개소)		관측망 확대		☑ 2018년까지 조기완료
☑ 50초 이내		경보시간 단축		☑ 25초 이내 (2018년까지)

내진대상 확대 및 내진보강 강화



지진연구 및 지진대응역량 강화

- 정부합동으로 활성단층 조사 추진 및 지진 연구 확대, 인력 및 예산 확대

현장에서 작동하는 매뉴얼

위기관리매뉴얼 개선

SOP(표준행동절차) 중심
1기관 1매뉴얼화

과거 작동하지 않는 매뉴얼

총 374개 기관
7,206개 매뉴얼
(표준 33, 실무 329, 행동 6,844)

핵심위주로 현장작동하고 훈련으로 계속 개선되는 매뉴얼

개편이후

재난대비 체계 확립

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(10.30~11.3) 실시

- ▶ 전체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일반 국민 참여를 통한 체감형 훈련 실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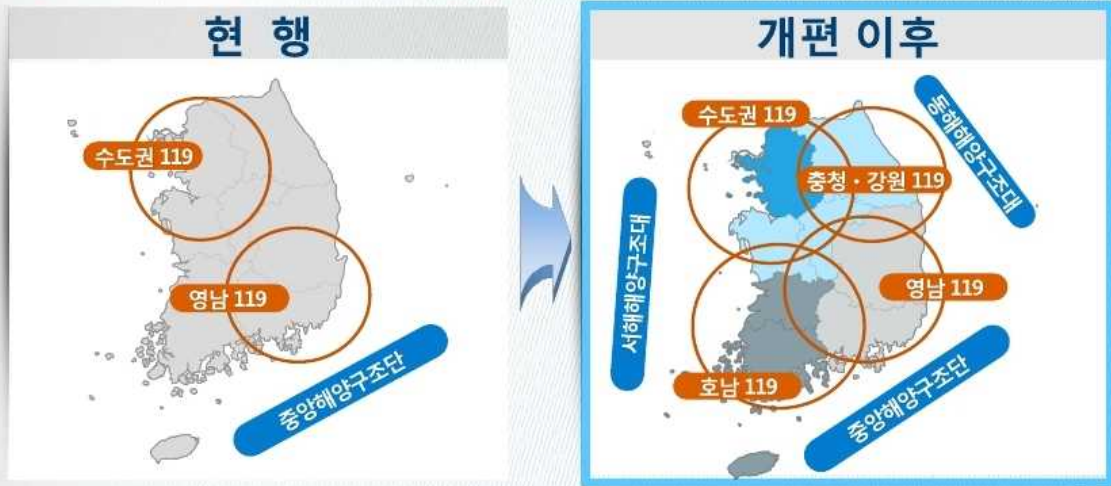
■ 긴급신고전화 통합

- ▶ 21개 각종 신고전화를 재난 119, 범죄 112, 민원 110 등 3개로 통합
- ▶ 119, 110이 상호 정보 연계로 신고접수 및 대응시간 단축으로 현장대응 골든타임 확보



특수구조대 확대 개편

육상재난은 전국 30분 이내, 해상재난은 전국 1시간 이내 대응



육상구조대 2개소 → 4개소, 해양구조대 1개소 → 3개소로 확대

단계별 인력 보강 추진(~'17)

재해구호체계 확립

복구지원체계 관리 개선

-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사회재난까지 복구지원체계 확립

복구지원 역량 강화

- 기업의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한 민·관 합동 재해구호물자 지원
- 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합동 복구 실시



재난보험 운영 강화

재난취약시설 배상책임 의무보험 도입('17.1~)

- 도서관, 주유소, 여객터미널, 장례식장, 지하상가 등 다중이용시설 19종, 17만 개소
- (보상금액) 대인 피해 1인당 1.5억, 대물 피해 1사고당 10억

사람 중심 재난 지원체계 개선

■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 개선

- ▶ (현행) 시·군·구 단위 → (개선) 시·군·구 + 피해 읍·면·동
- ▶ 대상지역 확대에 따른 재난피해 주민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

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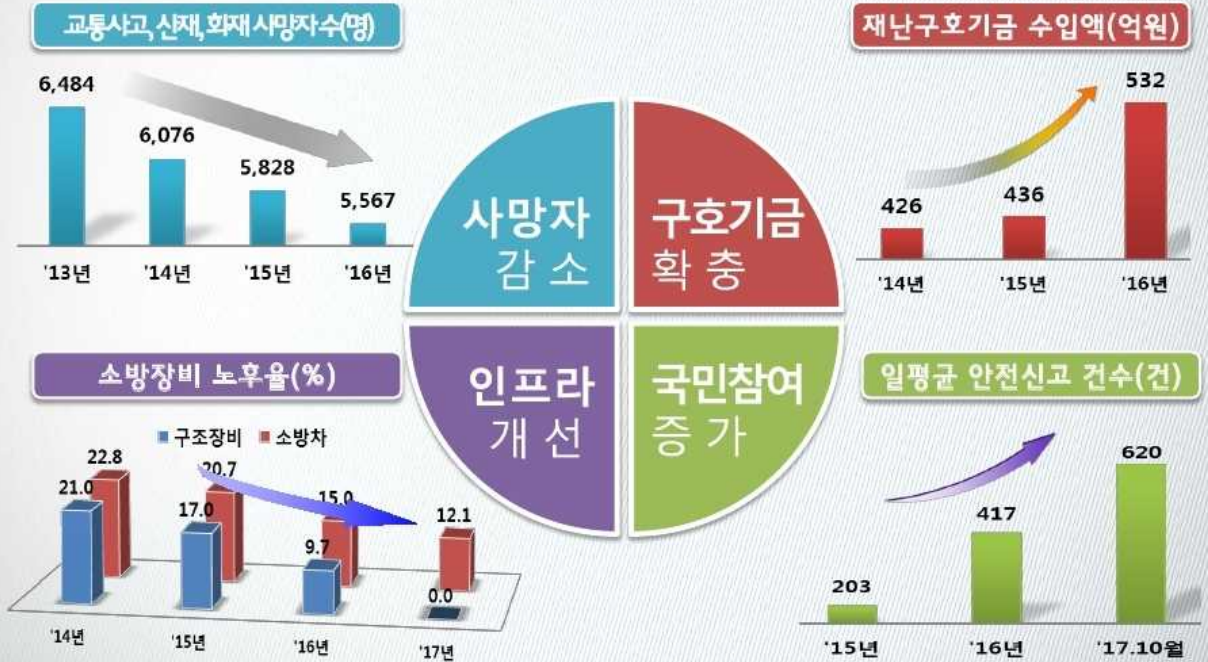


■ 국가의 재난지원체계 사각지대 해소

- ▶ 공공안전 목적의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에 재난관리기금 사용 확대
- ▶ 재난 위험 노후 아파트 등을 '도시재생 뉴딜사업(국토부 주관)'과 연계하여 정비
- ▶ 재난지원금 지원 단가 현실화, 전기·통신료 등 간접지원 범위 확대, 소상공인 지원 확대

안전한 대한민국

주요 정책 추진성과



새로운 정책 환경 변화

국민들의 '안전'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

- ▶ 매슬로우 욕구 5단계 이론에서 '안전'은 기본적 욕구에 해당
- ▶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'안전' 이슈가 사회 문제화



'18년도 헌법 개정 시, '국민안전 기본권' 신설 추진

- ▶ 대형사고 이후, 안전한 사회에 대한 국민적 여망 증폭
- ▶ 국회의원, 일반국민 대상 설문에서 헌법에 반드시 담아야 할 기본권 중 '안전권'은 모두 상위권 차지 (국회의원 1위, 일반국민 2위)

헌법에 반드시 담아내야 하는 기본권은 순위%	
국회의원	일반국민
1 안전권	1 생명권
2 안전권	2 안전권
3 생명권	3 임시참여권
4 건강권	4 건강권
5 정보기본권	5 환경권
6 양심행동 확대	6 아동권
7 이동권	7 양심행동 확대
8 정치참여권	8 정보기본권
9 양명권	9 양명권
10 기타	10 기타

우리가 만들어 갈 안전 한국의 미래 모습, 2022 SAFE-KOREA



안전한 국가 	행복한 국민 	과학기술 기반 
<p>국가는 언제, 어디서든 국민보호</p>  <p>중앙정부</p>	<p>국민 스스로 안전 지킴이</p>  <p>생애주기별 안전교육</p> 	<p>4차 산업혁명을 통한 재난관리</p> 



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
행복한 안전 대한민국